

유승민 '명퇴' 국회법 재의 6일이 D데이 되나

원내회의 주제·野원내대표와 국회법 협의 등 의연 행보

정치적 타격 최소화하면서 물러날 명분 얻을 듯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당무를 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9시 평소처럼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전날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제2연평해전 13주기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자신의 거취문제를 논의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자신의 거취를 놓고 당내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대립하며 세력대결 양상을 보일 태세인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평소 활동 모습 그대로다.

아침 출근길부터 회의 직후까지 취재진들의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한 집요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어느 때보다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비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로서 백척간두에 선 형국인 만큼 되도록 입을 굳게 다물고 평소처럼 행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유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은 비록 온도 차는 있지만 결국엔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 대

통령과 청와대도 유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장고(長考) 끝에 내놓을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당내에서 '대통령이나, 여당 원내대표나 양자 택일하라'는 국면에 이르게 되면 결국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유 원내대표가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건 시기와 방식뿐"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유 원내대표가 결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유 원내대표 자신의 손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 거부·폐기됐기 때문에 정치적 타

격을 최소화하면서 물러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1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추경 당정협의회에 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원우철 정책위의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한자리에 서는 게 어색한 장면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실무적인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책위의장이 정책 공조를 위한 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출범

文 "집권 엔진...새도캐비닛 역할 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동안 주춤했던 '경제정당'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서 여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인 와중에 야당은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제정당'을 앞세워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진력,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등 경제계 관련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앞으로 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둑하게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위원회는 당의 집권 엔진"이라면서 "총선 승리를 넘어 집권하는 순간까지 위원회가 경제분야의 '새도 캐비닛' 같은 역할 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와외의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국민과의 정쟁만 선호하고 있다"면서 "비판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민생 챙기기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우석훈 민주당정책연구원 부원장,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KIST 교수,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등 진보개혁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한편,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개최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 재벌 개혁을 역설했다. 개혁적 보수라는 가치 아래 독립적인 민간중립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여부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 주재로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재의 6일 우선 처리"

與 "본회의 입장후 표결때 퇴장"... 野 "투표참여" 강력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복귀와 함께 새누리당에 대해서 표결 참여를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해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이 결정된 데 대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한

영한다"며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은 사유화된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멈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해 당당히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와 입법부 위상 확립은 새누리당에 달렸다"며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야당과 국

회를 상대로 품수를 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문이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부결 사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와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2010년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정국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함께 부결이 나신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였고 반란은 같은 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 등 친박과 야당이 손잡았다"며 "배신의 정치? 유승민(원내대표)?"라고 비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여권 내부 갈등의 틈새를 노려 비박계와 손잡고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야에 표결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략이 통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될 경우 '전면전' 방침을 세웠지만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국민 여론의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폭정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영록, 농지 임대차 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질병·장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생식물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적인 경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차하는 간척농지의 경우 열매피해 제거 등 안정적인 영농여건으로 개량해 활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행 임대차 기간인 3년을 임차인의 안정적인 농지활용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송정~순천 복선전철화, 광주~부산 5시간 단축"

광주 송정과 순천 간 철도노선이 복선전철화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국회의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이 공동 개최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의 100% 복선전철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전선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는 광주 송정~순천 간 노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임영길 호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경전선 미완성 구간인 광주 송정~순천 복선전철화 사업만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465km 거리가 355km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현재 6시간 45분에서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영·호남 지역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경전선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가 이뤄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